

사설

미룰 수 없는 총학생회의 '역할 찾기'

학생 자치의 위기는 한두 해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학주보가 해묵은 총학생회(총학) 아이템을 꺼내든 것은 좀 더 먼 시야로 총학의 역할을 바라보기 위함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총학의 역할에 비해 총학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80년대 중반 총학은 직선제 부활과 함께 대학 사회의 요구만이 아닌 민주화운동으로 상징되는 시대 과제를 수행했다. 선배들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총학을 중심으로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며 캠퍼스는 이른바 '투쟁하는 공간'의 역할을 했다. 민주화의 길로 들어선 90년대 이후, 총학은 학생 자치 기구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했다. 학생복지 담론을 내세운 비운동권 총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총학은 뚜렷한 정체성 없이 대학 내 이런저런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화 투쟁'이라는 공통 담론이 사라진 지금의 총학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전국 모든 대학이 고민해 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 오랜화두다. 총학의 현주소는 애매하다.

개표조차 겨우 진행되는 선거와 늘어나는 학생회 구성 실패, 공통의 담론 발굴보다 축제에 사활을 거는 모습, 지난해 탄핵 투표까지 부처졌던 불투명 논란, 매년 지적되는 허술한 공약 설정으로 총학을 향한 학내 구성원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못해

비관적이다.

하지만 그 물밑에 자리하는 학생들의 무관심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 투쟁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독재 타도와 같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통의 이슈는 사라졌으며,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며 총학이라는 매개 조직에 의존할 필요성이 약화 됐다. 더불어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생도 사회의 엘리트라는 생각이 약해졌고 이에 따라 총학의 정치적인 행보는 매우 조심스러워졌다.

과거와 같이 정치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 정치적 의제를 다룬다면 공적 의제를 발굴해 공론장을 형성하기는 커녕 반감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다양해진 학생들의 정치적 의견을 수렴할 수 없을뿐더러 학생들 스스로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총학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총학의 역할은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그 맥락은 10년을 주기로 변해가는 듯하다. 정작 2000년대 이후 총학의 치열한 방향성 찾기는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총학은 여전히 과거를 거울삼아 위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총학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이다.

총학의 제 역할 찾기를 기대한다. 다행히 국제캠퍼스 새 총학이 지난해의 불통 이미지를 벗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다만 그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학생사회와의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이미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자신의 역할, 나아가 존재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줄기를 바란다.

세시봉

우매한 의사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4일이 지났다. 시작서를 낸 전공의 8,945명(전체 전공의 중 72%)의 복귀는 요원하다. 서울대병원도 뇌출혈, 폐암 등 일부 수술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80대 환자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했다.

논조가 각기 다른 언론들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한마음으로 비판했다. 드물게 보는 '언론의 의기투합'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때 응원받던 의사가 왜 왕따가 됐는지 돌아봐달라"는 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유를 찾아봤다. 결국 공공의대 설립 등 지난 시절들의 과업에서 등장한 이유와 비슷하다. 의대생 증원은 근본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의료비 폭증과 의료 질 하락을 야기,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 문제를 직접 겪는 전문가의 견해니 애써 무시할 순 없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환자를 앞세운 집단행동의 결과로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50%가 미뤄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와도 다를 없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일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의사를 대표한다는 단체들은 환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본인을 '우매한 의사'라고 주장하는 전공의 A 씨는 이번 달부터 전임의가 될 동료 3분의 2 이상을 잃었지만 병원에 남았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를 일일이 나열하면서도,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던 위기의식으로 끝까지 병원에 남았다. 서울의대 학장은 졸업 축하에서 "의사는 숭고한 직업으로 높은 경제적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견? 있을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맞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개인의 권리다. 하지만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는 방법을 동원하면서 국민과 정부의 공감을 원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환자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다짐한 그들의 선택이 있는 한 말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R&D 예산 삭감

과학입국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R&D 예산 삭감 과장이 대학가를 흔들고 있다. 대학원생 인건비 삭감이 대표적이다. 연구과제 수요도 줄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석·박사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자원 부족 국가인 한국이 R&D를 소홀히 해선 곤란하다.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지배자가 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를 지원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R&D 예산이 삭감되기 무섭게 과학계에는 암담한 소식이 전해진다.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기술 수준이 한국을 앞질렀다. 중국에 뒤쳐진 기술 분야 중엔 첨단 모빌리티와 차세대 통신도 있었다. 한편,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의 큐브위성을 달에 보내주겠다는 나사의(NASA)의 제안에 한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기술 경쟁에 이어 달 탐사 경쟁에서도 한국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다.

반대 여론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아쉽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농업박람회에서 그를 둘러싼 수십 명의 농민들과 즉석 토론을 벌였다. 정부의 환경 규제로 빨간 농민들을 설득하고자 대통령이 직접 '대민 접촉'을 감행한 것이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책에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을뿐더러, 국민과의 소통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로 나라를 세운다'라는 뜻의 '과학입국', 이를 위해선 과학계와의 소통을 통한 합당한 지원 약속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만평 연구의 효율화는 누구를 위한 것?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